

전환기의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10.2.9 (화) 14:00~16:30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전환기의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진행순서

1부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 사■ 개 회 사 및 기조연설<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 수 희 (여의도연구소 소장·국회의원)
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성 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국회의원)■ 주제발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 덕 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안보통일연구부장)-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ul style="list-style-type: none">- 류 길 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 영 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 의장·서강대학교 교수)- 백 승 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주 성 하 (동아일보 통일전문기자)- 조 용 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개 회 사



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진수희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입니다.

먼저 국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후배 국회의원님, 축사를 해주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님과 현인택 통일부장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제·토론을 맡아 고견을 주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박사님,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님, 김영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원장님, 북한대학원 류길재 교수님,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님,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님,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조용남 상임감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중이 주도할 G2의 신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 위기의 발생 이후에는 G8을 대체하여 ‘G20정상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를 보면, 이 지역은 G2뿐 아니라 일본·러시아 등 세계질서의 축을 이루는 강대국들이 포진되어 있고,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과 군비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한반도는 군사적·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역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한은 분단 이후 상이한 발전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팎의 국력순위에 ‘G20정상회의’의 의장국

이 될 정도로 ‘Middle Power’(중견국가)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고래싸움에 등터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새우’가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돌고래’ 수준의 국력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수령절대주의체제와 권력세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핵문제를 일으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주민들의 자유는커녕 기본생활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실패국가’(failed state)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만 잘 한다고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이어, 2019년부터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10~15년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선진일류국가에 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북한 또한 이 기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의 근대화혁명을 성공시켜야 회복 불능의 황폐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대북정책’을 ‘한반도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문제’를 ‘우리문제’로 인식하여 공존공영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어쩌면 통일은 아주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우리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경영하며 선진형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한반도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한반도정책은 크게 3가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아래 북한궤 안보위협요인을 축소하고 제거하여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만들어가는 평화창조(peace-making)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상생 공영하는 ‘행복한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경제 재건을 위해 한반도 통합경제권의 틀 속에서 북한의 시장화와 산업화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정책은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만성적 기아상태에 처해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삶의 희망을 찾아주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반도정책이 성과를 만들어낼 때 상생과 공영의 통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공동체를 복원하는 ‘재(再)통일(re-unification)’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의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인간공동체를 ‘건설’하는 ‘신(新)통일(neo-unification)’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1세기 세계화·자유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통일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자유·인권·행복이 존중되는 통일국가의 건설을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면서, 통일과정에 북한의 근대화를 지원하고 실행하는 정책내용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통일국가의 건설을 위해 경제적 역량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통일과정을 선택하고 최적의 통일비용을 산출하여 통일비용을 가급적 적게 쓰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능력을 양·질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일과정에서 국제적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능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라는 현실 속에서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주변 4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견인할 외교력을 갖추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의 투명한 정책결정과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체제의 성격과 변화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판단기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경제·사회적 재건에 적극 동참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통일이면 무조건 善”이라는 식의 통일지상주의를 극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소멸이 아니라 발전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에 대한 확신과 사상적 무장을 위한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논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세를 감안하면 금년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적기(適期)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일회용 정치이벤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핵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60년간의 분단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과 고향방문,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 특수이산가족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동포들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전환기의 세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여의도연구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자리해주신 내외 귀빈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9일
(재)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진 수 희

축 사



한 나 라 당
대표최고위원
정 몽 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인 한반도 및 남북문제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토론회 준비에 힘써주신 진수희 소장님과 여의도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당장은 국민들의 안전 보장이라는 절대적 명제가 걸려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미래의 국가적 명운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그 동안의 고립을 벗어나려는 듯한 일련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이 한반도 정세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 6자회담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태도 등이 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 북한의 후계자 선정 문제, 식량문제, 근래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대치 등은 여전히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2010년의 한반도 및 남북관계의 정세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특히 북한의 불확실한 미래와 함께 이에 걸맞은 우리의 한반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인 동시에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대 또한 큼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분들께서 활발한 토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고견을 잘 수렴하여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9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 몽 준

축 사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 덕 룡

세계화시대의 남북관계로!

우리나라 최초의, 또 최고의 정당 정책연구소라 할 여의도연구소에서 이번에 「전환기의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상당한 조정기를 거치고 새로운 원칙에 기초해 재정립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고, 또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몸으로 겪어온 바와 같이, 그 동안의 남북 관계에서는 혹독한 냉전의 겨울도 있었고, 동포애에 바탕한 햇볕도 만끽해 봤습니다.

맹목적인 적대와 미움도 안되지만,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은 무조건 좋은 것이요, 모든 통일 은 좋은 것이라는 감상이나 낭만도 지금은 벗어날 때입니다. 멈추어 서서 남북관계 전반, 곧 평화와 협력의 문제, 세계화시대의 남북관계 성립, 나아가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고 정립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남북관계는 새롭게 그 틀이 짜여가고 있습니다.

서해 해역에서 포성이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의연이 대처한 결과, 마침내 남북관계의 틀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 논의가 새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개성관광이나 금강산관광은 달라야 합니다. 누구는 일방적으로 주고, 누구는 안전보장도 해주지 않은 채 돈만 챙기는 그런 관광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남북경색을 무릅쓰고 일관되게 원칙을 고수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은 과연 옳았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비로서 남(南)이 인센티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2010년은 위기의 해이자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신년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 하였고, 얼마 전에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그러나 원칙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가를 전제로 하는 대화, 선언적인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시대의 남북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6자회담 문제도 한국을 봉쇄해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아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적대나 미움, 낭만과 감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습과 통일의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생각건대는 남북 민족이 함께 손잡고 세계화시대를 헤쳐 나가는 방안, 함께 고기를 잡으려 나가는 실용적인 방안도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통일문제도 민족의 에너지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에서 새롭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의 토론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한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 고견을 발표하고 토론해 주실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2월 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 덕 룡

전환기의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목 차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 15 - 윤 덕 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안보통일연구부장) ■ 통일코리아 향한 모색 23 -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로 : 한반도의 미래에서 2010년이 갖는 의미 37 - 류 길 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2010년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로 43 - 김 영 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 의장·서강대학교 교수) ■ G2시대 논쟁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책 조정 49 - 백 승 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에 대한 토론 59 - 주 성 하 (동아일보 통일전문기자) ■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과제 67 - 조 용 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 ● ●
2010년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



윤 덕 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안보통일연구부장)

2010년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

윤 덕 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 내부 정세

가. 권력세습 구도 구축 추진

2009년 북한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즈음하여 대남 전면대결 태세, 핵·미사일 실험 등 초강경 벼랑끝 정책을 통해 대결국면을 만들면서 군을 동원하여 대내 체제 정비와 후계 구도를 만드는 작업을 해 왔다.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 이후 이례적인 군 수뇌부 인사이동을 통해 김영춘, 오극렬 등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당이 주도하던 대남사업을 국방위원회의 정찰총국이 장악하여 남한에 대한 전면 군사대결 태세를 강화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를 재편하여 국방위원의 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늘려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미사일과 핵실험 등으로 극도의 대외적 긴장국면을 조성하여 내부 동요를 막고 체제와 후계구도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동원하였다. 동시에 김정일 위원장은 건강이상에도 불구하고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해 공식 활동을 1.5배 늘렸고, ‘150일 전투’를 통해 주민들을 총동원하여 극도의 체제단속을 하였으며 이어서 ‘100일 전투’를 실시 중이다.

더욱이 북한은 2009년 11월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경제난 하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자본주의로 형성된 중산층을 와해시켜 정권에 대한 도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 한다.

2010년 북한은 강화된 선군체제를 통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일소하고 결속을 꾀하는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 권력세습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 군을 동원하여 체제와 후계구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권력세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일단 군을 동원하여 후계구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만, 젊은 후계자가 막강한 군부세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군부를 정리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김정일 위원장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핵무장과 대미 관계개선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핵무장과 대미 관계개선은 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정상체제화를 통해 후계구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경제적 어려움 지속

북한은 1990년대는 경제위기 이후 이렇다 할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자연발생적인 암시장과 계획경제가 혼합된 혼합경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핵·미사일 실험, 지원 피로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크게 감소한 반면,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선군체제 하의 북한은 부족한 물자마저 일반 경제 부문이 아닌 핵무기 개발 등 군사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경향을 보여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downward spiral)에 빠져 있다. 2009년 북한 경제는 국제지원의 축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제는 '빈곤의 늪'에 빠져 있으며, 산업 구조는 공업 기반의 붕괴로 전형적인 후진국형으로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을 통해 강제노력 동원 방식의 속도전을 전개하고 화폐개혁 등을 단행하여, 체제 단속과 함께 과거 사회주의 경제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생산 부문의 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계획경제를 복원하고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지만 화폐개혁은 북한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극심한 인플레이와 사회불안으로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를 198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 40억 불의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외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미·북, 일·북 관계의 진전을 추진하여 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남북관계 전망: 남북관계개선 추진

북한은 2008년에 이어 2009년 상반기까지 대남 위협과 강경 조치들을 지속하여 대남 대결국면을 부각, 대내적 체제정비에 활용하였다. 2009년 1월 전면대결 태세 선언 및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 선언, 3월 개성공단 출입 차단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북한은 대남 강경자세에서 돌변하여 대남 유화공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계기 조문단 파견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표명한 이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였다.

2009년 8월 북한 조문단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거 통상적으로 북한은 남한 정부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1~2년간 대화를 중단하고 비방 및 위협을 가했다. 이때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부재에 대한 국내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국내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결국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하반기이후 북한의 대남 유화접근은 미·북 협상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함께 북한 스스로가 대결국면을 위해 2년 가까이 희생했던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틀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 1970년대 초 '7.4 공동성명'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군부를 극좌모험주의로 정리하고 김정일로의 공식승계를 이룩한 바와 같이, 북한이 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후계구도 구축 및 공고화를 위해 대남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한국으로 부터의 1만톤 옥수수 지원 수용과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2010년 1월25일 서해 NLL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27일 이후 해안포 사격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의 모순된 행동은 역설적이지만 남북 경협과 미·북 대화의 사전 포석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며, 6자 회담 복귀전까지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도의 매우 자제되고 제한된 저장도 도발에 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북한은 계획경제 복원, “인민생활 향상”, 후계구도 ‘공식화’ 등 일련의 대내적 목표를 위한 외부의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군사적 위협과 남북 경제협력을 분리해 경제적 실리를 위한 남북 대화에는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하고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을 재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스스로 중단시킨 남한의 대북 지원 틀을 복원하려 할 것이다. 국제적 제재 하의 북한 경제·식량난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는 한국의 안정적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지원체제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2010년 북한은 안정적인 권력세습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판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얻는 데 주력하면서, 핵문제 등 정치·군사 문제는 가급적 한국과 협상을 피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으로 계획경제 복원을 추진하는 북한으로서는 향후 많은 자원과 물자의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결국 북한은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얻는 데 상당한 관심이 있을 것이다.

3. 대외 관계 전망

가. 미북 관계 개선 노력 지속

북한은 2009년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 여기자 2인을 구금하는 등 벼랑끝 외교를 재가동하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자초하여 대외 대결국면을 조성, 체제결속을 피하면서 헌법 개정, 국방위원회 재편, 군 수뇌부 인사이동 등을 단행하여 세습 후계구도 구축에 활용하려 하였다. 이는 1993년 클린턴(Bill Clinton)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을 탈퇴하고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과 유사하다.

대내 체제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북한은 대외환경 정비에 나섰다. 1993~94년 1차 핵 위기 당시와 동일한 전술로 접근한 것이다. 우선, 클린턴 전 대통령을 여기자 석방을 위해 초청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와 양자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조문단 파견,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전달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대남 조문단 파견,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등으로 본인의 건강 과시 등 체제 안정성을 선전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는 정상회담 가능성, 미국에는 비핵화 의지, 그리고 중국에는 6자회담 가능성을 각각 흘림으로써 국제 공조의 틀을 깨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은 북한의 핵포기 결단 없이 6자회담과 미·북 양자대화에 입각한 북핵 협상이 재개·진행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후계구도의 공식화를 위해 핵보유와 함께 미북관계개선이 필요하다.

2010년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과 지원을 고려하여 형해화되어 틀만 남은 6자회담에 응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미·북 고위급 대화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초반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제재를 완화시키고, 중국·일본·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북 간 협의 시 평화체제 문제를 적극 제기해 나감으로써 핵문제에 대한 협상의 초점을 흐리고, 협상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 틀 내의 미·북 고위급 직접협상을 통해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지위, 즉 핵무장도 인정받고 대미 수교도 얻는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은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의 2000년 미·북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미·북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2.13 합의에 입각하여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미·북 간 군축회담을 요구할 것이다.

나. 중북 협력 관계 유지

중·북 관계는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방북을 계기로 복원되어 2010년에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6자회담 참여 문제를 중국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전략 목표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관망하면서 현상유지적 입장을 취하고,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낙후한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한 자원 개발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높지만,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하는 대규모 대북 지원은 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국·미국 등이 대북 지원을 재개할 경우, 중국도 이에 상응하여 대북 지원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다. 대일 접근 강화

북한은 일본 민주당 정권이 대북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냉전 붕괴로 가장 어려웠던 1990년 초, 가네마루(金丸 信) 당시 자민당 부총재와 현재 민주당 최고실력자인 오자와(小澤 一郎) 간사장의 방북을 계기로 대규모 지원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북한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대일 접근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납치 문제 해결 의지를 민주당 정권 측에 전함으로써 북·일 협상의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민주당 정부도 납치 문제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즉, ‘대화와 압력’을 병행한다는 입장에 기반하여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남북대화도 진전될 경우, 민주당 정부는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0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대북 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우리의 과제

1. 남남갈등의 극복과 통일에 관한 컨센서스

-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비용부담에는 냉담
- 분단을 통한 안정을 선호하는 입장 증가
- 국민적 지지없이 통일 불가능

2. 국제협력과 지원의 확보

- 통일외교의 중요성
- 관련국 전략대화의 강화

3. 북한주민의 선택

- 독일통일은 동독주민의 서독 선택 결과
- 탈북자는 북한주민의 선택 시금석



통일코리아를 향한 모색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코리아를 향한 모색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통일이냐, 새로운 분단이냐?

통일을 향한 결단을 내려할 때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다면,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성취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사의 피동적인 객체로 머물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으로 한민족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이제 식민지 시대와 분단시대의 100년을 마감하고, 통일 민족사의 새로운 장(章)을 펼쳐야 한다.

통일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환경은 결코 낙관적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두 개의 분단국가 상태로 21세기 민족 미래를 열어가는 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수립은 한반도 통일 상황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은 통일대계(Grand Design for Korean Unification) 수립으로 마련된다. 국가발전전략은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통일청사진(Blueprint for Korean Unification)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적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아주 빠른 템포로 세계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 주변 지역의 힘의 역학관계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21세기 한반도는 또 다시 중화제국의 패권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은 국가존속의 한계 상황에 내몰려 전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령체제 하에서는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합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스런 국가’로 상당기간 존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체제유지를 위해 스스로 친중정권을 창출하거나 실질적인 보호국으로서의 존립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변화된다면, 분단국가 한국은 미국일본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였다. 하나는 북한과의 ‘불안한 동거’ 또는 친중화된 북한과 더불어 분단국가 상태를 ‘그럭저럭’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중화제국의 패권아래서 새로운 분단체제

가 구축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분명 다른 길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통일의 길이 있다. 한반도의 두 개의 분단국가 상태를 해소시켜 하나의 국가상태 즉, 통일코리아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다. 통일코리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허브(Hub)로서 동북아 '평화의 축'(Axis of Peace)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가교이자, 21세기 인류 사회의 새로운 메신저로 우뚝 서게 된다.

이제 우리는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 지역의 중화적 질서 속에서 새로운 분단 체제를 다시 받아들인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섰다. 통일은 더 이상 선택 시안이 아니다. 통일은 자립적 국가의 미래를 위해 회피하거나 유보될 수 없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과제이다. 통일은 오로지 우리의 판단과 의지, 그리고 역량에 달려 있다.

2. 통일 환경 : 미·중관계의 변화

2-1. 미국의 퇴조와 중국의 부상

팍스아메리카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미국은 130년 이상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위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롱 런'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이제 미국은 20세기의 미국이 아니다. '9·11 테러'와 그에 이은 아프간·이라크 침공 등으로 인한 과도한 국력 소모로 미국의 힘은 가파르게 퇴조하기 시작했다. 어느 면에서 미국은 헤게모니의 지속을 논의하기보다는 미국과 세계에 보다 덜 충격적이면서 차분하며 점진적인 후퇴 즉, '우아한 퇴조'(a way to descend gracefully)를 모색하는 노력이 바람직 할 수 있다(I. Wallerstein, "The Eagle Has Crashed Landed" *Foreign Policy* July-August 2002). 현재의 국제질서를 미국의 쇠락이라는 측면보다 다른 모든 나라들 즉,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으로 이해하면서 워싱턴이 이러한 새로운 국제조류에 적절한 대응과 적응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F. Zakaria, *The Post-American World*, 2008). 그러나 미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유보적인 견해 모두 미국의 상대적 퇴조에는 공감하고 있다.

2020년 경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을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 9%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의 기여비율이 30%를 상회하고(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5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력신장세가 멈출 것이라는 가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세계은행의 통계는 2008년 중국의 GDP가 3조 9천억 달러(미국 14조 2천억 달러, 일본 4조 9천억 달러, 독일 3조 7천억 달러, 한국 9천 3백억 달러)에 이르러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매력지수(PPP)로 평가된 중국 GDP는 7조 9천억 달러(미국 14조 2천억 달러, 일본 4조 4천억 달러, 독일 2조 9천억 달러, 한국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이 연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미국이 연 2% 경제성장률에 머문다면 2018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매일경제〉, 2009.07.26).

대공황 이후 초유의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는 커다란 현재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 발생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시기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구매력지수(PPP)로 평가된 GDP 규모 측면에서는 훨씬 빠른 시기 내에 미·중 양국의 경제규모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추월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창설을 주도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한 세기 이상 인류 문명을 선도해온 국가로서 ‘환영받은 제국’이었다면, 중국은 인류 사회에서 아직 ‘환영받지 못하는 제국’의 이미지가 강한 신중화주의 패권추구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2-2. 국제질서 : 군사적 단극 및 경제적 다극질서

군사력 차원에서 미국에게 도전할 국가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재편 측면에서 21세기의 초입 단계인 현재,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미국, 중국, EU 중심의 국제질서로 개편되면서 세 중심세력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 중이다. 미국, 중국, EU가 상호 견제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과거의 소비에트 블록,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 이른바 ‘제2세계’ 국가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제2세계’의 미래가 이들 세 중심세력과 어떻게 관련을 맺느냐에 달려 있다면, 세 주도 세력의 미래도 ‘제2세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구도 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쇠퇴와 국제적 영향력의 퇴조로 미국의 미래 역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P. Khana, *The Second World: Empires and Influence in the New Global Order*, 2008).

G2의 미·중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중심의 군사적 단극 체제 하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두 차례의 ‘미·중 전략 경제대화’(2008.12, 2009.7) 이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과 채무국과의 만남”이 정례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된 중국 자산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며,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려 든다는 여론이 일부 존재하고, 미국에서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나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산중의 지름길을 계속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지만, 얼마동안 다니지 않으면 풀이 우거져 막힌다’(山徑之蹊間介然用之而成路 爲間不用則茅塞之矣, 孟子「盡心」)”고 하여 미·중 협력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단극적 위상은 일정기간 유지될 것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위축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규모의 상대적 축소 및 위상의 변화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우월적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이미 다극체제로의 변화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신안보센터(CNAS)는 올 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부상에 따른 다극체제로의 변화에 대비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재설정 방향과 리더십 유지 전략을 제시하였다(A. M. Denmark and J. Mulvenon eds., *Contested Commons: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in a Multipolar World*,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2010). 현재 미국은 과거 60여 년 동안 세계의 질서와 안보를 유지해왔던 유일패권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극체제 아래서 미국의 역할과 리더십 형태의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 문제는 이제 ‘친미/반미’의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한반도 통일추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미국의 패권이 퇴락하는 ‘미국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2-3. 우호적 통일환경 창출

독일 통일은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종주국 구소련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과정 속에서 서독은 동서독 통합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콜(Helmut Kohl) 수상은 영국 대처 수상과 프랑스 미테랑(Francois Maurice Marie Mitterrand) 대통령의 독일 통일에 대한 거부와 비토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대통령의 협력과 지지를 업고 소련의 고르바초프(Mikhail Sergeevich Gorbachev)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마침내 통일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독 정치지도자들은 국제질서의 변화로 조성된 통일 우호적인 환경을 놓치지 않았으며, 천재일우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동서독 통합 상황과는 달리, 현재 한반도의 통일 환경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중국이 세계대국으로 급격히 부상함으로써 통일 환경은 매우 복잡한 국면에 처했다.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 서북부지역 색외(塞外)민족의 흥기는 한반도와 중국 북동지역의 정치적 강세로 이어졌지만, 20세기 후반 이래 중국 서북부지역의 제민족이 중국에 대부분 통합됨으로써 한반도는 대국 중국의 중압감을 쉽게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처럼 우리의 통일 환경은 독일 통일의 국제 환경과 전혀 다른 국면에 처했다. 한국 통일에 가장 우호적일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반면, ‘한반도의 통일도 북한의 붕괴도 바라지 않는(不統不亂)’ 중국의 국력이 날로 강성해지고 있다. 이는 불가역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통일을 머뭇거리다면 역사의 신(神)은 더 이상 우리 한민족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대미전략과 대중전략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시켜 지지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여기에 대미·대중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대미관계에서 21세기형 한·미 가치동맹에 기반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는 한편, 대중관계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통일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며,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중국의 안보우려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미전략과 대중전략의 갈등적 상황을 슬기롭게 회피하는 한편 상호 보완의 공동이익의 창출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3. 통일대비 태세

3-1. 북한 미래 대비

북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북한체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다. 지금도 북한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세계사적 추세를 거스르는 행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한층 어둡게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시기에 중국과 함께 개혁개방의 길로 나왔더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핵개발 노선을 고수하였고, 그 결과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핵심 사안이 되어왔다. 핵보유 의지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피폐와 만성적 식량 위기로부터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위기의 실체를 객관적·사실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김정일 수령체제는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의지도 역량도 없는 맹목적인 독재체제일 뿐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조그마한 희망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일 시대의 조락(凋落)

김정일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돌연한 죽음과 함께 등장한 김정일 시대는 ‘국가의 실패’에다 자연재해까지 겹쳐 수 백 만이 아사하는 대기근의 참상 속에서 출발했다.

그 후 김정일은 오로지 군사제일주의 노선인 ‘선군정치’에 입각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로 통치의 기반을 닦았다. 피폐해진 경제와 만성적 식량난과 대량아사는 그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며, 더구나 그의 관심사조차 될 수 없었다.

현재까지의 김정일 시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단계인 1994년에서 2004년의 시기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전개되었다. 즉, 이 시기에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인 시장화 경향이 나타났다. 정부의 배급체제가 해체되면서, 장마당·농민시장 형태의 초급 단계의 시장화가 진전되었다. 식량 배급은 사회주의 통제체제의 기본적인 계급화 원칙을 공공연하게 반영하는 메카니즘으로, 공식분배시스템(PDS)의 붕괴는 계급화 원칙의 훼손을 가져왔다. 이 후 이러한 배급제의 붕괴로 국가가 아닌 시장이 식량 할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 북한은 제1차 핵위기를 봉합한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의 틀 하에서 거의 5년 가까이 대미(對美) 타협국면이 지속된 시기를 맞이하였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더불어 대외관계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들자, 2002년 시장화 추세를 용인·수용하는 ‘7·1조치’를 단행하였다. 경제개건 조치 당시 이미 경제성장은 10년 넘게 하향국면을 치달았고, 대부분의 공장설비가 망가지면서 중앙계획경제는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한 상태였다. 이에 북한은 산업부문의 해체에 따라 무정부적으로 진행된 시장화 과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이른바 ‘계획경제+시장화’의 혼합형의 이중 체제가 유지되는 듯했다. 이러한 조치는 당국의 자발적 개혁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양보로 나타난 수세적·방어적 조치에 불과했으나, 어쨌든 ‘상향식 시장화’ 과정이 나타났던 시기였다.

김정일 시대 두 번째 단계는 ‘시장에 대한 체제 측의 반격’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 다시 시장화 추세를 거스르는 반개혁적 조치가 취해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2006년 중반부터 “자본주의 환상을 품고 망쳐놓은 것을 다시 고쳐 사회주의 원칙에 의거한 경제관리제도를 재확립하는” 방향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시도했다.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 북한 사회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신흥 상인계층의 성장, 농민층의 자립기반 확대, 권력기관의 구조적·체계적 부패, 국가자산의 횡령·은닉 등의 현상이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체제 밖에서 자생적 경제기반을 확립한 시장친화적 세력이 성장해온 과정이자, ‘안으로부터’ 체제 자체가 해체·와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의 후반기는 체제 차원에서는 ‘시장과의 전쟁’이, 주민생활 수준에서는 ‘장바구니와 완장’과의 대립이 일상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연말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화폐개혁은 더 이상 심각한 수준의 시장화와 체제해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에서 단행된 조치였다. 상인 자본의 몰수로 시장 세력을 몰락시켜 국가통제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이 조치는 후계자 구축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광범한 시장 세력과 그와 결탁하거나 연계된 반사회주의 세력의 물질적 기반을 와해시켜 후계자체제의 토대를 굳히겠다는 시도였다. 그러나 시장 세력과 상인을 겨냥한 전략은 되려 외화나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새해를 넘기자 말자 엄청난 인플레이와 식량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면서 북한 당국조차 당혹감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장과의 한 판 승부는 이미 판가를 난 모습이다.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사회주의 세력의 타도 차원에서 단행된 화폐개혁은 향후 북한 체제의 내과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여기에서 세습후계자 구도 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예측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김정일 시대는 2012년~2013년 무렵 체제지속의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핵을 포기하는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며, 경제회복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의 후계제가 지속된다 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세습후계체제 구축은 쉽지 않다. 더욱이 올해 시장과의 승부가 실패로 귀결된다면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상실과 함께 시장화는 더욱 빠른 템포로 진행되면서 체제 이완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목표인 ‘강성대국’은 희화화 되면서 2012년~2013년 사이 체제지속의 전환점을 맞이할 개연성이 크다.

북한의 체제유지 역량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다. 개인과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배급제와 당 조직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침투와 통제능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과 ‘억압’이 동시에 존재했고, 당의 사상사업을 통한 조직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박형중, 2009). 현재 북한은 당 기구가 약화되었고 폭력과 테러를 통한 억압적 통제로만 유지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위기상황에서도 지속되어온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치엘리트들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김정일 수령통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통치엘리트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체제결속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통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탈출구’(Exit)를 제시하는 방안이 기대된다.

3-2. 남한 통일 준비

통일대비와 국민통합

‘분단과 분열’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한 민족, 두 국가’라는 민족 분단은 65년 째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한 국가, 두 국민’ 상태를 30여 년 이상 겪고 있다. 남북한 분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 두 국민’의 분열 상태가 구조화되어 국론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이념 갈등을 해소하면서 민족 미래를 향한 통일 논의와 통일 준비를 위해 국민적 컨센서스를 도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대비를 위해 국민통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양극화 해소가 급선무로, 중산층의 하향 몰락을 방지하고 ‘동반성장’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부강하고 잘사는 선진조국 건설 주창도 의미가 있지만, 누구를 위한 선진조국인지 불분명한 캐치프레이즈는 국민들에게 좀처럼 와닿지 않는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화’ 또는 ‘선진화 통일’ 등의 근대화의 후속적 개념 으로서는 ‘발전’의 지속 이외의 특정한 목표나 지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근대화는 산업화 전략으로 추진되었으며,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사회운영 원리에 이르기까지 서구사회를 모델로 하는 서구화를 의미했다. 한국의 근대화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성공 신화를 창조했으며, 그러한 성공의 기반 위에서 오늘날 북한을 포용하면서 민족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배제와 통제의 논리 속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되면서, 근대화의 혜택이 편향되게 분배되어온 경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소외계층과 거부·비관세력이 양산되어온 한계가 노정되었다. 통일대비를 위한 국민통합은 누구도 배제·소외되지 않고 모든 계층이 함께 미래를 열어간다는 확신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달려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미래와 통일을 향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2012년~2013년 이후 산업화 세력은 60대 이상 연령층이 되며, 민주화 세력은 40~50대 연령층으로 한국사회의 주도층이 된다. 여기에 20~30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수혜 세대이지만, 산업화·민주화 세대와는 달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불안정한 상황에서 당혹해 하고 있다. 이들 모두 미래와 통일의 길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통합 리더십에는 동반성장의 가치체계 아래, ‘우리 함께 가자!’는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메시지를 고대하고 있다.

북한 동포에 대한 무한책임

북한 주민은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백 년 이상 빈곤과 억압의 굴레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없었다. 자유와 인권, 빈곤해방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백 년 동안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 남한 이외에 누가 북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체제유지만이 최고의 국가목표인 북한 통치층에게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문제는 적극적인 관심 사안이 아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민족의 미래 앞에서 북한의 극소수의 특권적 지배층의 입장을 변호할 수는 없다. 우리 시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존재 양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통일은 북한 동포의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통일은 절실하고, 그야말로 아주 절박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4. 통일 전략

4.1. 통일대계 수립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다. 대북정책은 통일을 향한 ‘전략적 목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즉, ‘평화인가, 통일인가’에 따라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런 점에서 ‘선 평화, 후 통일’의 기조가 지속되었다. 체제와 이념이 아주 다른 한반도의 두 개의 분단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평화체제는 궁극적인 목표일 수 없으며,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야 한다. 이에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를 모토로 삼아야 한다.

대북정책의 목표인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대계를 수립해야 한다. 통일대계 수립으로 통일정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정책과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통일대계는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과제를 범주화하고 체계화시킨 청사진이라 하겠다. 통일대계는 △통일철학, △통일비전 및 필요성, △통일방안 및 통일프로세스, △통일전략, △통일국가의 체제, △통일비용, △통일 후 국민통합방안, △통일코리아의 미래상 등을 담아야 한다.

특히, 통일코리아가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 등을 확립하는 동시에, 법적·제도적 통일의 목표 지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정책은 이러한 통일대계를 지침으로 삼아 각 분야의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업으로 제시된다. 통일대계는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통일 형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4.2. 개방화 및 시장화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비핵화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제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북한은 핵무기를 다목적용으로 개발하였다. 우선 낡은 재래식 군사장비와 병참부족을 보완하는 전략적 억제력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남북경협과 대남통일전략전술 차원에서 협박용·과시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핵무기가 북한체제의 속성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 안보차원에서만의 단순한 접근은 한계가 있다.

북핵문제는 “북한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접근해야 하며, 북한문제는 통일 전망의 지평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통일 ⇒ 북한문제 ⇒ 북핵문제). 북핵문제는 북한문제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국 대북정책의 실패는 대개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등 긴급한 안보 현안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핵문제가 북한체제 문제와 결부된 ‘북한문제’라는 측면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개혁정책 문제를 검토했으나 핵·미사일 폐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대북정책 대안에서 ‘북한개혁’ 정책을 탈락시켰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 오바마 정부는 비로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아직도 대북정책을 북한문제로 접근한다는 명백한 태도는 아니지만), 장기적 접근전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평화체제, 관계정상화, 경제협력 등 북한의 요구 사항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2005년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그리고 북한 핵시설 불능화에 합의한 2007년의 ‘2·13 합의’의 재확인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아래 북한 핵시설 불능화 수준 즉, ‘미래 핵’의 봉합과 함께 핵확산 방지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 개방유도 및 시장화 지원

한국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국제공조 속에서 미국의 대북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북한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면, 북한문제의 해결은 미국과 함께 한국의 몫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되 목표지향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은 반드시 북한의 개방을 유도·촉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안보·경제협력·인도적 사안” 등의 패키지를 세 바스켓으로 다룬 ‘헬싱키 협정’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협력 부문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물론 한국도 비핵화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개방화와 시장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개방과 시장화는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을 비롯하여 북미 관계개선 과정에서 한국 주도의 북한 개방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북한의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SOC 개발사업, 산업체계 복구, 에너지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 ‘녹색 한반도’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되, 실질적으로는 남북한 물적·인적 교류를 본격화하는 대북 개방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문제를 통일의 전망 위에서 개방화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한 개혁의 지름길이자, 통일로 이끄는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요구된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최소한 몇 차례 개최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하며, 이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통일을 위해 북한 통치엘리트층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북한 통치엘리트층은 통일을 결사코 반대한다. 통치엘리트층 통일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이들의 우려와 거부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코리아에서 그들의 존재와 역할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와 달리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통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방안으로 통일코리아는 중앙(연방)정부의 지도아래 다양한 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치·자율의 원칙 위에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준)연방제 통일방식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작은 북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

5. 새로운 통일방안 모색

통일은 반드시 합의통일 원칙 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통일을 통하여 국가통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통일의 접근시각으로 민족공동체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는 ‘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 방식이다. ‘민족공동체’는 하나의 통일국가 상태라기보다는 한겨레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따라서 이제 통일방안은 삶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보다는 실제로 법적·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국가체제의 새로운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5-1. (준)연방제 통일방안

통일은 ‘평화, 민주주의, 지역균열구조 해소’를 위한 국가개조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합당한 대안은 (준)연방제 통일방안이다. 연방주의(Federalism)는 21세기 국가유형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다원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로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준)연방제 디자인은 통일코리아가 대략 13개의 지역(지방)정부를 포괄하는 연방제 국가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방제는 지방자치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달리 ‘남북연합’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른 완전통일로 가는 중간 과정인 과도적 통일체제로 구상되었으나, 남북한 현실과 미래 전망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 연방제와 민주주의: 연방제는 지방정부의 자치(regional self-rule)와, 단일 정치시스템 내에서 중앙 정부의 공치(shared-rule)와의 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지역적 자치 및 공치”(regional self-rule plus shared-rule)의 원리를 말한다.
- 연방제와 평화: 분권과 자치 이념이 구현되는 국가 유형인 연방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관계에서의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지방정부,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 지방정부 대 국제기구, 지방정부 대 기업’ 등의 복잡다기한 상호 협력적 관계망의 확대를 통해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5-2. 코리아연방공화국(Republic of Federal Korea) : ‘평화/민주주의/지역주권’ 이념의 구현

통일코리아는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분권’의 이념에 기반하여 각 지방정부의 ‘지역주권’이 보장되는 방식의 (준)연방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 연방제 통일에 의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하나의 중앙(연방)정부와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될 수 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지리적, 문화전통적, 교통권 및 경제권을 기준으로 대략 8도 내지 13도(남한 8도, 북한 5도) 지방정부로 구성할 수 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남한의 다수의 지방정부를 비롯한 북한 여러 지역의 자치와 지방주권을 보장하는 국가체제이다.

통일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 전체를 하나의 정치체(polity)로 끌어안는 통합 방식은 위험하며 또 다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는 예멘의 통합 사례가 여실히 증명한다. 더욱이 남한의 과도한 주도 방식은 엄청난 부담과 함께 북한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기 쉽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방향 위에서 각 지방정부의 이념적 포용성과 시장경제로의 전환 수준을 그들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 한반도 전역의 연방제 통일로 북한 각 지역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중앙중부 중심주도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북한 지역 전체의 민주주의적 자치·자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의 헌법체제 아래 북한 지방정부의 헌법체제를 통해 다당제가 도입됨으로서 북한의 민주주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지역 주민의 자치·자율을 존중보장하는 헌법적 계약 위에서 지역적 다원주의의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고, 지역전통의 존중, 지역적 생활정치 영역 보장확대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

(준)연방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역균열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 연방제는 민주적 구조 속의 정치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균열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가체제의 재구조화 또는 국가체제 개조의 역사적 계기가 아닐 수 없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대략 8개~13개 정도의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연방제국가체제이어야 한다.

□ 2020년 : 통일원년

2020년을 한반도 통일원년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한국은 2020년의 세계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포스트 김’ 시대의 북한의 변화를 한민족 통일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기다리는 통일’ 보다는 ‘다가가는 통일’이 필요하다. ‘떠맡는 통일’ 보다는 ‘끌어안는 통일’이 기대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통일리더십이 절실히 요망된다. 평화와 통일은 만들어 가야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들이닥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반드시 통일로 이끌어야 한다.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을 갖춘 정치적 리더십이야말로 통일과업에 결정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통일리더십과 함께 민족의 미래에 대응하는 냉철한 전략가 그룹의 존재와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가지도자 그룹의 통일 의지와 통합형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상호 설득적인 논리 개발과 함께 초당적인 합의 도출의 관행도 기대된다. 통일을 향한 정치권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을 묶어내야 한다. 통일 리더십은 ‘전략적 마인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차가운 전략 마인드와 더불어, 한민족=한겨레의 역사와 영혼을 끌어안는 ‘혼’(魂)이 담긴 리더십이 요구된다.



2010년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로 : 한반도의 미래에서 2010년이 갖는 의미



류 길 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0년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로

: 한반도의 미래에서 2010년이 갖는 의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I. 북한이 처한 조건

-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쳐야 하는 북한에게 2010년은 매우 중요한 해
 - 신년공동사설에 밝혔듯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기를 마련
 - 외부로부터의 지원 유인: 중국의 지원 지속 및 한국의 지원 증대
 - 권력승계구도의 안정적 추진
 - 6자회담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흥정할 수 있는 입지 확보
 - 목표 달성을 위한 상황과 조건은 북한에게 지극히 불리
 -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그렇고, 강성대국 건설의 해를 2012년으로 잡았던 2000년대 초와는 달리 핵협상을 유리하게 타결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조성되지 않고 있음.
 - 화폐교환 이후 주민들의 불만 고조, 정권의 대응 수단 고갈, 엘리트 내 갈등 가능성 점증 등 내부 혼란의 전조 대두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고수
- ※오바마 정부는 출범 당시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이를 접고 북한의 신뢰할 만한 선(先) 행동 요구
-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 고수
 - 일본 정부의 혼란으로 대북 정책 이니셔티브 고갈
 - 중국의 관여정책만이 유일하게 북한에게 위안이 되는 정도임.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강경한 여론이 비등

II. 2010년을 움직이는 변수

□ 김정일의 결단 여부(NEGATIVE)

-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혁개방으로의 정책 선회
- 미국의 정책이 좀 더 완화되고, 중국의 추가적인 관여정책 옵션을 통한 자극이 있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이 가능성은 낮음.

□ 북한 주민들의 불만, 행동으로 표출(NEGATIVE)

- 주민들의 생활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3대 세습 구축과정으로 인한 암울한 미래로 반정부, 반체제 행동의 움직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음.
- 엘리트들의 균열이 갈등으로 발전하고, 국가보위부 등 보안기구들의 사기저하와 주민들의 저항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할 경우 봉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정권의 통제 하에 보안 기구들의 대대적인 억압과 처벌이 자행된다면 관리할 수 있음.

□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POSITIVE)

-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어 6자회담이 속개되어 협상국면이 온다면 북한 내부의 혼란상태도 진정국면이 될 수 있음.
-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됨.
- 비핵화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처리, 대북 지원 등으로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 가능성도 낮아짐.

□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NEGATIVE)

- 미국 정부의 입장은 완고하며, 협상팀보다 비핵산팀의 입지가 강함.
- 대북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대북 인식도 변화 여지가 거의 없음.

III.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

□ 가장 바람직한 상태

- 핵협상 타결(Grand Bargain)과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인입
- 남북한 평화공존을 통한 상생과 공영 ⇒ Least Likely

□ 가장 나쁜 상태

-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혼란으로 결국 정권이 몰락하는 상태
- 김정일 부재시 권력승계를 계기로 혼란의 뇌관이 폭발하는 상태
-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개입하는 상태
⇒ 단기적으로는 Less Likely, 중기적으로는 Highly Likely

□ In-between

- 핵협상의 부분적인 타협과 경제난의 부분적인 완화, 엘리트 균열 지속, 주민 불만 지속, 보안기구의 강력한 통제 지속
- 김정일 부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muddling through 상태
- 문제 해결의 지연을 의미

⇒ 단기적으로는 Highly Likely, 중기적으로는 Less Likely

□ 2010(~2011)년은 위 세 시나리오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기

- 북한의 장래와 그에 따른 변동의 시나리오 중 어느 편이 우리에게 유리한 지를 가늠하고 이에 대해 최선의 대응책을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한 시기
- 북한의 행보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으며, 단지 타이밍의 문제만 있음.
- 따라서 우리의 국가전략과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전략과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

IV.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 목표

□ 한국의 장기적 국가 비전

- 선진국 도약, 민주주의와 복지 정착, 지속적 경제 발전
- 안보와 평화 증진, 동북아 협력의 중심국가
- 에너지와 환경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통한 미래 지속가능한 공동체
- 개방과 교류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상생과 공영에 기여하는 국가

□ 남북관계와 국가 목표

-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는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합되고 연계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해 자생력을 가진 나라로 거듭나야 함.
⇒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
-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환경 및 자원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의 협력체계 구축
- 통일은 그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음.

□ 남북관계와 국가전략

- 북핵 협상 타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설득과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관여 정책의 ‘도우미’
- 북한 경제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
-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결합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역할분담과 조율” 그리고 “도우미”
- 국제적 관여정책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킹, 국제적 역할분담을 위한 대화와 협의를 조성
- 한국의 주도성을 강조하지 말아야
-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는 국제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
- 통일에 대한 조급함을 덜어내고 장차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새로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국제사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야 함.
- 한국의 정책이 정당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됨



2010년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로



김 영 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 의장·서강대학교 교수)

2010년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로

김 영 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 의장
서강대학교 교수)

[종합평가]

- '09년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위로부터의 변화’를 사회 전반에 강력하게 요구
 - 강성대국 건설(201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적 대고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국가동원계획을 강도 높게 실행, ‘노동’을 국가계획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임
- 시장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사영화 및 정보유통 속도의 증가로 인한 체제 이완현상을 막기 위해,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
 - 화폐개혁조치라는 위로부터의 변화에 따라 체제 안정성 및 사회변화 경로가 새로운 계기를 맞이 함으로써, '10년 북한사회의 변화는 체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
 - 국가의 공권력이 주민들의 사적 영역을 강제함으로써, 계획경제에 따른 사회시스템 작동이 부적 강화, 주민통제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최근 북한내부 동향]

1.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전투와 속도 : 개혁과 개선 / 초강도 강행군
- 통제와 단속 : 제초제 살포 형식 / 변화와 저항의 싸움 원천봉쇄
- 달리기와 고이기

2.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 시장의존도 ↑
- 공·사 구분 ↓
- 정보유통속도 ↑

- 체제작동원리 동요 : 토대와 성분 중심의 가치 흔들
- 주민의식변화 / 남조선관심 증가 / 여성의식 변화 / 신병탈영 증가
- 빈부 격차 / 지역격차 심화
- 주민들 계층화 진행 / 배급의존 계층, 시장의존 계층, 무대책 계층
- 체제유지 고비용구조 확산
- 의미 있는 변화 진행 중

3. 현안과 목표는 무엇인가

- 현안 : 김정일체제와 폐쇄체제 유지
- 북한 당국의 목표 : 강성대국 건설(2012)과 남조선통일

4. 2010년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

- 제목 :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구호

-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 《인민을 돕자!》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 주요 용어 및 표현

- "우리 군대와 인민은"(9회)
- 혁명적 대고조(27회)
- 주체(11회)
-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전략전술로 승리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 희천 속도 / 초강도의 강행군
-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
- 민심을 틀어쥐고 민심에 맞게
-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
-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

□ 평가 및 전망

- 신년 경제공동사설의 성격
-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책임을 엄격하게 따지는 국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공을 남쪽으로 넘기는 남한 책임론을 구사
- 북미관계의 근본문제는 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하게 반복 제시함으로써 북미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부각
- 2009년<150일 전투> <100일 전투>에 이어, 2010년은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365일 전투>의 해로 예상

5. 2010년 : [국가주도 체제작동원리 강화] / [주민들 울렁울렁]

[2010년 북한 동향 예측 및 남북관계 전망]

1. 2010년의 주요 연표

- 김정일 방중(2월 중)
- 2.16 김정일 생일(68회)
- 4.15 태양절(김일성 생일)(98회)
- 4.12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담
- 4.19 60주년
- 5월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
-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6.15공동선언 10주년
- 6.25 60주년
-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 10.10 조선로동당 창당 65돌
- 11월 G20 서울 개최
- 11월 미국중간선거: 오바마 평가
- 한일강제병합 100년

2. 북한체제변화 예측 포인트

-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 판단
- 김정일 체제의 권위이양 문제와 폐쇄체제 유지여부
- 북한 주민들의 반응 예측 / 화폐개혁의 후유증 예상

3. 2010 북한체제 전망

- demand vs. support 의 차이
- 민심의 비중 ↑
- 공권력과 공적 시스템 이상 징후
- 문맹률 ↑
- 불법, 범죄 ↑
- 북미관계, 남북관계 : 대치 & 경색 & 돌발 & 긴장고조 & 이벤트 속 불안정 ↑

4. 2010 남북관계 : [출렁출렁]

- 남북 각각의 필요성과 전략적 판단에 의거, 정상회담 가능성 고조
- 명분과 실리의 부조화로 인해, 정상회담의 합리적 선택은 힘든 국면
-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전격적 개최 가능성이 더 높음
- 정상회담 이후의 후유증과 갈등은 이전 정상회담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
- 북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로 선택이 결정될 가능성 높음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된 결과, 미증유의 '북한사태'를 경험할 가능성 높음
-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남북관계 향방의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
- 이 과정에서 남남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G2시대 논쟁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책 조정



백 승 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G2시대 논쟁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책 조정

백 승 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1. 이끄는 면서

2009년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G2개념'(Group of Two)이 다시 관심을 이끌고 있다. 2006년 Zbigniew Brzezinski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 학술행사에서 'G2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중국과 미국이 양자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처하는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런던에서 2009년 7월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런던 G20정상회담에서 미·중 양 정상은 양자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기후, 이란·수단·짐바브웨와 관계를 논의하기도 했다.¹⁾

세계질서가 '미국의 시대'에서 '중국과 미국의 시대(Chimerica시대)'로 진행할 것인가? 이러한 용어가 현실을 국제정치의 현실을 담고 있는가? 중국이 지금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있다면 방향성 측면에서 G2의 시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조건인 '경제적 고성장 유지, 정치안정' 측면에서 논쟁적이다. 특히 정치안정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겪은 '성장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차세대 중국 지도자들이 이를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G2시대에 맞는 영향력,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경제력, 군사력,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아직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G2시대는 여러 가지 흐름을 반영한 미래를 담아내는 전략용어이지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G2는 일시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여타 국가의 경제위기, 특히 일본의 경제적 침체가 용어의 적실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

이 글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G2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비교를 통해 세계질서의 흐름을 짚어보고, 한반도 안보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안보정책, 특히 군비증강정책을 조망하는데 있다.

*본 토론문은 KIDA가 2010년 2월 중 발간 예정중인 보고서에 기고할 원고 초고입니다.

1) China worry of 'G2' with US:analyst

(<http://www.defensetalk.com/china-ay-of-g2-with-us-analyst-17430>)

2. G2시대 논쟁: 중국과 미국의 국력비교

경제규모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08년 미국을 진원지로 하여 전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에서 그 격차 축소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격차 회복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2009년에는 중국 GDP는 미국에 비해 약 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GDP 격차 비교〉

(단위: 1조 달러)

년도	중국 GDP	미국 GDP	미국 GDP대비 중국GDP 비중	증가율
2000	1.2	9.76	12.3	
2001	1.32	10.1	13.1	
2002	1.45	10.42	13.9	34%
2003	1.64	10.92	15	
2004	1.92	11.68	16.4	
2005	2.23	12.42	18	
2006	2.67	13.2	20.2	68.3%
2007	3.38	13.8	24.5	
2008	3.95	14.3	27.6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and CIA World Factbook

그러나 경제규모 이외의 1인당 국민소득, 군사력, 과학기술능력 등의 분야에서 아직 중국이 미국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를 단기간에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미래 국력 경쟁에서 중요한 지표가 과학기술력 비교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적 능력 수준: 물리학 논문 지표('97~08 누적) 기준〉

국가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 지수 (미국=100)	인용수 지수 (미국=100)	종합지수 (미국=100)	랭킹
미국	218,045	2,719,244	100.0	100.0	100.0	1
독일	104,592	1,100,855	48.0	40.5	44.2	2
일본	117,017	899,691	53.7	33.1	43.4	3
프랑스	74,124	683,324	34.0	25.1	29.6	4
러시아	80,575	458,682	37.0	16.9	26.9	5
중국	86,679	371,287	39.8	13.7	26.7	6
영국	55,085	577,457	25.3	21.2	23.2	7
이태리	49,700	449,636	22.8	16.5	19.7	8
스페인	28,461	261,164	13.1	9.6	11.3	9
한국	32,313	191,334	14.8	7.0	10.9	10
캐나다	24,759	238,065	11.4	8.8	10.1	12
인도	28,786	162,061	13.2	6.0	9.6	13
이스라엘	14,040	147,556	6.4	5.4	5.9	18

*출처: KIDA, 성채기 외 『동북아 군사력 평가』 (2010)

경제규모에서 미국과 격차를 급격히 좁히고 있는 중국이 명실공히 G2로서 세계사의 중심국가로 등장하느냐는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낙관론과 비관론이 병존하는데 미국 랜드(RAND)연구소의 ‘중국 경제지형의 균열대’(Fault lines in China's Economic Terrain)는 비관론의 대표적인 보고서이다.²⁾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사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문제를 여덟 개의 균열대(fault lines)를 제시하였다. 즉 실업, 빈곤, 사회혼란, 부패, 에이즈와 전염병, 수자원 부족과 오염, 에너지 소모와 가격상승, 취약한 금융체제와 국유기업의 문제, 해외 직접투자의 저하, 타이완 해협과 지역충돌 등이다. 이러한 위기군이 동시에 발생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성장 둔화, 고용 감소, 사회문제의 확산과 같은 위기의 도미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2010년 전후를 ‘위기다발기’로 보고 있다.

보고서와 달리 2010년에 진입한 중국경제는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서도 7~8 %정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낙관론은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경제 약점을 극복할 것이라는 예측에 토대를 두고 있다. 첫째, 중국이 앞으로 도시화 건설을 통해 유효한 공급을 제공하며 아울러 ‘농촌, 농민, 농업’이라는 삼농(三農)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가 정부투자에 상응하는 투자원이 되며, 셋째, 외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넷째, 저비용 양질의 노동력을 통한 제조업 성장이 지속될 수 있고, 다섯째 서부 대개발, 동북진흥 정책, 중부지역 부상 등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동북아 국가 간 영향력 경쟁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약해지고 있지만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우월적 지위를 동북아에서도 확보,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과 강력한 쌍무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아태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사일방어계획(MD)을 추진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어떤 국가나 세력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는 전략조건을 완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호주-인도-일본을 연결하는 새로운 정치군사적 협력 축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가 동북아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국제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중국은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유엔진출을 반대하면서 한국 등 역내국가의 ‘일본 거부정서’를 활용하여 ‘반일본 심리적 동맹’을 구축하는데 정성을 들이고 있다. 특히 미국을 진원지로 한 금융위기를 중국의 지위향상 기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고유가’로 확보된 국부를 활용하여 동북아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향력을 복원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Charles Wolf, Jr., K.C. Yeh, Benjamin Zycher, Nichola Eberstadt, Sungho Lee, Fault lines in China's Economic Terrain(RAND, 2003)

동북아 지역 주요 국가 간의 쌍무관계도 새로운 진영형성의 초기 단계적 특징을 보이며 ‘유동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양국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식한 가운데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출범한 하토야마가 이끄는 일본은 최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조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군사질서에 불만을 간접 표시하고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기제’를 만들려는 노력은 구체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구조’로 진전시키려는 주장을 중국, 한국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북핵 미해결 상황’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현안은 북핵문제이다. 북한의 2차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노력이 사실상 좌절국면에 있다. 동북아에는 분단국가의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상태에 있다. ‘대만의 독립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잠복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만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려는 미국’과 ‘이를 불용하려는 중국’의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남북관계는 조정을 겪고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이전에 본질적 관계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4. 동북아 역내 군비경쟁

미국 역내국가의 군비경쟁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일동맹/한미동맹을 축으로 지역 내 군사적 우월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공군을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해군은 2008년 8월에 재래식 항모인 키티호크함을 원자력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잠수함 전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군은 최첨단 전투기인 F-22 1개 대대를 최초로 괌에 순환 전개했다. 양자 동맹조약에 기초하여 일본, 한국에 주요전력을 배치하고 있다.³⁾

〈미국의 병력규모, 2009Military Balance〉

구 분	상 비 군					예비군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C/G	
병력(만명) 상비군:153.96 예비군:97.93	63.22 (41.1%)	33.95 (22.1%)	34.05 (22.1%)	18.67 (12.1%)	4.07 (2.6%)	육 군 : 54.70 해 군 : 12.62 공 군 : 19.10 해병대 : 10.43 C/G : 1.08
주요부대	군 단 3 사 단 10	함 대 6 사령부 2	AEF 10	사 단 3	-	-

※ AEF : Air & Space Expeditionary Force(항공우주원정군)

※ C/G : Coast Guard

3) 국방부, 『2008국방백서』(국방부, 2009), P.14 참조

〈미군의 주요 장비 현황, 2009Military Balance〉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대	
전차/장갑차	포	항공기	잠수함	함정	항공기	항공기	전차/장갑차	항공기
42,742	6,763	2,216	71	424	2,092	6,002	1,966	742

일본

일본은 2007년 1월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켰다. 자위대는 24만여 명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면서, 구형 무기체계를 도태시키고 첨단무기를 증강하고 있다. 2004년도 신방위계획대강을 중심으로 군구조를 재편하는 등 질 위주의 전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무기체계는 기존의 콩고급 이지스함 4척 외에 신형 아타고급 이지스함 2척, 아파치 공격헬기 6대 등이다. 현재 신형 전차와 13,500톤급 헬기 탑재 호위함 및 공중급유수송기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 현재 5기의 군사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공동으로 2010년까지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⁴⁾

〈일본의 병력규모, 2009Military Balance〉

구 분	상비군(자위대)			예비군
	육 상	해 상	항 공	
병력(만명) 상비군 : 23.03 예비군 : 4.16	13.84 (60.1%)	4.41 (19.1%)	4.56 (19.8%)	육상 : 4.00 해상 : 0.09 항공 : 0.07
	중양참모부 0.22(1.0%)			
주요부대	방면대 5 사 단 9	호위함대 4 지 방 대 5 항공전대 7	전투비행단 7	-

〈일본의 주요 장비, 2009Military Balance〉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전차/장갑차	포	항공기	잠수함	함정	항공기	항공기
1,840	1,150	433	16	191	293	627

중국

중국은 성장한 국가경제와 군사력 혁신노력을 결합시켜 항공모함 취역 등 ‘해외작전능력(투사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육군은 신속대응 능력, 해군은 원양작전 능력, 공군은 장거리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은 다수의 전략핵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에 있고, 다수의 공중급유기를 확보하여 장거리작전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은 2007년 1월에 탄도미사일로 자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하는 등 우주전력 향상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있다.⁵⁾

4) 국방부, 『2008국방백서』 (국방부, 2009), P.15 참조

5) 국방부, 『2008국방백서』 (국방부, 2009), P.15 참조

〈중국의 병력규모, 2009Military Balance〉

구 분	상 비 군				예비군
	육군	해군	공군	제2포병	
병력(만명) 상비군 : 228.5 예비군 : 80.0	160.0 (70.0%)	25.5 (11.2%)	33.0 (14.4%)	10.0 (4.4%)	육군 : 80.0
주요 부대	대군구 7 성군구 28 집단군 18	함 대 3 (북/동/남해)	군구공군 7 비행사단 32	군 단 6 여 단 20	-

〈중국군의 주요 장비, 2009Military Balance〉

육 군			해 군			공 군	제2포병
전차/장갑차	항공기	포	잠수함	함정	항공기	항공기	전략미사일
13,160	411	24,900	62	811	1,007	2,912	806

러시아 러시아 역시 동유럽지역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군사적 대비능력 확충을 결의 하고 있다. 2007년 F-22를 둘러싼 동북아 관련국의 입장은 이러한 군비경쟁의 현황을 잘 나타낸다. 러시아는 고유가로 축적된 국부를 기반으로 신형 유도장치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해상전력에서는 잠수함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항공전력에서도 보유중인 전폭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⁶⁾

〈러시아의 병력규모, 2009Military Balance〉

구 분	군 종			병종 및 직할부대				예비군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우주군	공수부대	직할부대	
병력(만명) 상비군: 102.7 예비군: 2,000	36.00 (35.1%)	14.20 (13.8%)	16.00 (15.6%)	8.00 (8.9%)	4.00 (3.9%)	3.50 (3.4%)	21.00 (20.4%)	2,000

〈러시아의 병력규모, 2009Military Balance〉

육 군 (공수부대 포함)		해 군			공 군	전략군		
전차/장갑차	포	잠수함	함 정	항공기	항공기	잠수함	미사일	항공기
50,040	25,301	135	1174	1126	2,641	15	608	89

6) 국방부, 『2008국방백서』 (국방부, 2009), P.15 참조

5.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 전망

북한은 ‘북한식 냉전해체구도’를 추구할 것이다. ‘북한식 냉전구조’란 한국정부와 민족공조 강조 속에 ‘고려민주연방제’를 추진하고, 미국과 평화공존을 강조하며 관계정상화를 대외전략의 기조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기조 속에 김정일체제가 유지되는 한 핵보유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가져야 체제가 유지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은 자신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과 추세를 인지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제유지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구축되어 있는 미국의 위상과 힘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미국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통한 ‘對 한반도 영향력 유지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두 개의 한국정책(Two Korea Policy)’을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본과의 관계는 대미정책의 틀 속에서 다루되, 경제지원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의 수단적 측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먼저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하는 것이 미북관계정상화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배상금 논의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하토야마정부와 북한간의 급격한 관계개선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중국과는 국내체제 유지 확보 차원에서 현재의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서 중국의 신뢰를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의 대남의존 심화가 초래할 정치의 대남 종속구도를 막는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국내체제 유지를 보장받는 차원에서 발전시킬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관계가 진행된다면 북한의 전략적 목적은 쉽게 달성될 것이다. 양안관계가 군사적 충돌로 진전될 경우 북한은 북중우호동맹조약에 입각하여 중국을 지지할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대동북아 정책, 한반도 정책을 지원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 지도자가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구소련시대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노력할 경우 북측은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을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다.

다섯째, 동북아 역내국가 들과의 경제협력 보다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선택할 것이다. 경제규모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북한경제 실상은 한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좋은 투자대상 국가가 아니다. 북한의 국내정치적 부작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전시키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을 통한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세계 차원의 경제기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6.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

이명박 정부는 “인종과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글로벌 외교를 대외정책의 기본가치로 제시하였다. 글로벌외교 역시 ‘이념을 넘어 실용’이라는 국정운영의 기본철학 속에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겠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과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 셋째, 우리의 신장된 국가역량에 맞는 대외 기여외교를 펴겠다. 넷째, 자원외교를 강화하겠다. 다섯째, 한국을 매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문화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러한 외교기조 속에 한국정부는 2009년 G20에 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2010년에 G20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적 차원의 G20논쟁, 동북아의 유동적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외교적 지위를 강화하였다. 지속적으로 외교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동북아정세의 변화’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고 있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급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면서 다른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북한핵문제로 인한 주변국의 대북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직시하고 이를 통일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김정일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수용하고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G2시대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1) G2시대를 고려하여 우리 안보태세를 성급하게 조정하려 해서는 안된다. G2는 미래 전략환경을 담아내는 용어이지, 현실의 국제역악구도를 반영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아직 크며, 적어도 군사적 차원에서 G2를 언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안보태세와 관련하여 G2를 고려하여 성급하게 조정하려 해서는 안된다. 한미안보관계는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와 등가적이지 않고 차별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동북아 각국의 군비증강 노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리 안보·국방정책은 이들 주변국가들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3)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불안요인은 분단극복, 남북통일이 되면 구조적으로 해소된다.

(4) 북한핵에 대한 안보적 대응에서 ‘독자적 핵개발’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지’와 ‘비핵화 노력’으로 핵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동북아정세를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는 양자 차원은 물론 다자 차원의 ‘통일외교 그물망’(net of ROK unification diplomacy)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에 대한 토론



주 성 하

(동아일보 통일전문기자)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에 대한 토론

주 성 하

(동아일보 통일전문기자)

언제부터 ‘우리의 소원’은 ‘북핵 해결’이 됐습니까.

오늘 제가 토론해야 할 주제는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살다 2002년 남한에 온 사람입니다.

지난 8년간 말이 아닌 몸으로 피부로 남과 북의 다름을 느꼈고, 동화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막연한 불안감 또는 환상으로 존재하는 통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질 체험하고 있는 당사자이자, 남과 북의 통일을 남한에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기간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했지만 오늘은 예외적으로 학술적 의미에서의 토론이 아닌 제가 체험하고 느끼고 본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을 이야기형식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 ‘햇볕정책’과 남한의 통일반대 여론의 상관관계

언제부터인가 남한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듣기 힘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 들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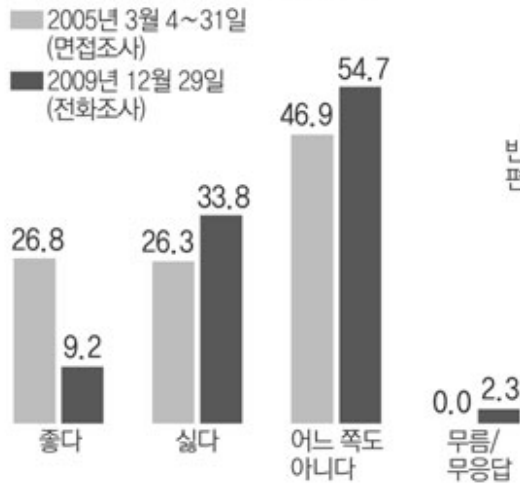
이 노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남한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없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동아일보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사실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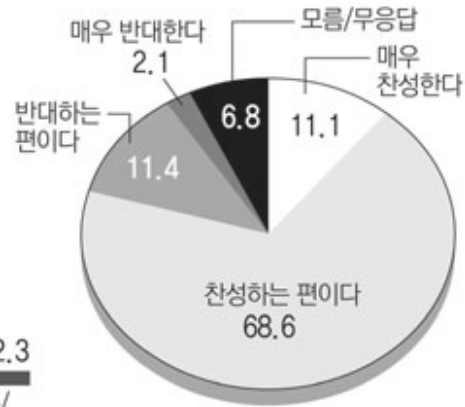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5년 전의 3분의 1로 크게 낮아져 응답자의 9.2%만이 ‘북한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2005년 3월 조사에선 ‘북한이 좋다’는 응답이 26.8%였습니다.

반면 ‘북한이 싫다’고 답한 응답자는 33.8%로 2005년 조사 때의 26.3%보다 7.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립적 응답은 54.7%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남북 정상회담 개최 (단위: %)



[출처: 동아일보 1월1일자]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원인이 햇볕 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햇볕정책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 하도 많이 언급돼 이 자리에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햇볕정책의 철학적 원칙에는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기간에 남한에는 역설적으로 통일 여론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시켰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이 좋다’는 응답이 햇볕정책 실시 10년 동안에 꾸준히 내려간 것이 생생한 증거입니다. ‘햇볕정책이 초래한 남한의 반통일여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보고 들은바 없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빨간 외투를 들추어 다 털어빠진 꺼먼 속살을 남한 국민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 교류확대가 이뤄지면서 남한의 여론은 북한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멀어졌습니다. ‘저런 사고방식의 소유자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니’ 또는 ‘저런 가난한 국가와 어떻게 함께 사나’ 등 통일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또 남한에 탈북자 2만 명 가까이 와서 살면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됐습니다. 결국 환상이 깨졌습니다. 아마 햇볕정책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빨리 환상이 깨져나갔을까요. 저는 햇볕정책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현상을 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로 우리가 북한 실상을 모르는 상태로 통일에 임한다면 혼란과 실망은 더욱 커지겠죠.

이제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를 때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해서 통일 의지를 북돋아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초기 20~30년간은 한반도의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후대 앞에 큰 편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통일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찾아올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 북핵문제와 한미공조 그리고 전략적 통일정책

통일이 사라진 자리를 ‘북핵’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북한관련 보도의 대다수가 북핵 및 6자회담 관련입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공조에 가장 큰 역점을 두는 모습이 현 정권 집권 이후부터 확실히 느껴집니다.

한미공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에게는 핵확산 방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미국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일까요.

반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자칫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핵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통일되면 북핵은 자연스럽게 제거될 수 있을뿐더러 그 이전에도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폭탄을 쓸 정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핵심이자 북한의 유일한 장사밑천인 북핵문제만 따라다니느라 정작 우리 고유의 문제인 통일문제에서 실리를 잃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라면 만약 북한이 그 사이에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하면 또 그 문제에 매달려 미국을 따라다니느라 기약 없는 세월을 또 하염없이 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것은 김정일이 쓰러진 이후입니다. 북한에 핵이 있든 수소폭탄이 있든 관계없이 현재로는 북한 체제가 김정일 수명과 함께 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북한을 붕괴시키려 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앓아죽든, 자연 수명대로 살든 이제 최대 10여년 남짓 남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그때부터입니다. 북에서 살았던 저는 특히 남한 사람들 보다 더 그 상황을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북한에서 살았고, 북한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통일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남북관계를 북핵에 종속시켜 놓고 천금같은 시간을 이렇게 마구 허비하는 것이 정말 너무 불안하고 위험해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빨리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일 시대가 끝난 뒤 후계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수 있을지, 정권이 붕괴될지 또는 급작스런 통일이 닥쳐올지는 아직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신격화가 사라진 북한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격화가 사라진 북한을 여기서 누가 상상하고 있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은 살아있는 신으로 북한 주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했지만 김정은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벌써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게도 혐오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공포의 통치에 짓눌려 관성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의 공권력은 어떤 형태로든 느슨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해 잘 사는 곳으로 나가려 할 것입니다. 김정일이 생존해 있을 때 벌써 수십 만 명이 탈북한 북한입니다. 탈북한다면 중국과 한국이 첫째 선택지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면전에서 분계선을 필사적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총을 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날 확률이 큰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선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반세기 뒤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코앞에 재앙이 다가오는 조짐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비켜갈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재앙은 국민연금을 아무 소용없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통일 문제를 5년짜리 단임 정권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초연하고 정권 임기외에도 관계없는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멀리 내다보면서 통일을 설계할 독립된 조직(위원회급) 창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은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범사회적인 조직 창설은 마음만 먹으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의 남북갈등, 통일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

독일은 분단 40여년 만에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씨’와 ‘베씨’라는 다툼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씨는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인들’이라는 뜻이고 베씨는 ‘거만하고 역겨운 서독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남북이 급작스럽게 통일되면 저런 모습이 재현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반목의 강도가 독일보다 몇 배로 높을 것입니다.

남북은 분단 70년 내에도 통일이 될지 말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다른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질감이 커졌고 또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갈등도 극복 못하고 있는 남한이 통일이 되면 개과천선해서 북한을 안아줄 도량을 보일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영호남 갈등은 봉합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북한 주민들과의 갈등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한에서 8년을 살아보니 안타깝게도 자꾸만 그림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지내보면 남한의 민족배타주의는 정말 심합니다. 물론 북한은 더합니다.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수천 년 역사가 다름을 배척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땅에 정착하는 탈북자나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미국과의 비교는 언감생심이고 심지어 이웃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힘듭니다.

저는 다행히도 나름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많은 탈북자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길어져서 이 자리에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남한 주민들은 대다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한 명으로부터 모욕을 받아도 그 모욕이 9명의 친절보다 더 머리에 각인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싫던 좋던 이 자리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억누르고 참고 살아가는 측면이 큼니다. 그러나 통일이 돼서 왕래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큰 세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때면 북한 주민들은 구태여 자신을 무조건 억누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으면 불만을 터뜨려버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북한 남성의 대다수가 10년 넘게 군에서 복무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폭력성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면 남북 대립은 내전을 우려해야 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남한 사람들이 불 때 북한 주민들은 주인의식도 없고 게으를 것입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사람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일 겁니다. 더구나 불만에 불을 붙이는 촉매제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면 남북 갈등은 다시 70년 넘게 이어질지 모릅니다.

통일되면 북한에 올라가 사업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업가의 대다수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상태를 잘 모르고 알려주는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선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시장경제에 맞게 적응시키고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의 절반 수준이라도 올려 세우는 것인데, 상황이 과연 우리 욕심대로 관리가 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력은 통일을 감당하기 충분한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외교력은 김정일 체제 이후의 상황을 우리의 의도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지금부터 다 따져봐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노력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통일 담론을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현 정부의 대북정책 골자인, 그러나 국민들에게 막연하게만 다가오는 ‘그랜드바겐’ 정책이나 수년째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비핵개방3000’과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지금 허송세월을 한 대가는 나중에 몇 배로 받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통일 대통령은 남한 국민들에게는 국가와 후대의 부흥을 위해 현재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 솔직히 고백하고 호소하고 설득하며, 북한 국민들에게는 갑자기 잘 살 수는 없으며 꾸준한 인내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함을 납득시키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국론의 사분오열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이끌 지도자나 정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통일한국에 대한 모색’은 우리부터, 나아가 통일한국을 모색하고 머리 속에 그릴 수 있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과제



조 용 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과제

조 용 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1. 현황

○ 개성공단 사업은

- ▲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
- ▲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대북 정책적 측면,
- ▲ 북측의 체제 변화와 통일과정상의 의미를 고려할 때,
확대 발전시켜야 할 남북 간 중요한 시범 사업

○ 118개 기업이 생산 활동 중('10.1), '09년 생산액은 2억564만 불로 전년대비 2%증가

- '09년 수출은 유럽·호주·러시아·중국 등에 2860만 불 실적
- '05부터 누적 생산액 7.8억불, 누적 수출액 1.2억불 기록

○ '09년 말 기준 남측인원 935여명, 북측근로자 42,561명 근무(전년 대비 9.3% 증가)

-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4.9세, 여성비율 81.4%
- '09년 1인당 노임 평균 수령액은 80.3불(임금 71.5불, 사회보험료 8.8불)

○ 그러나 3통문제, 신변안전 문제,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을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으로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 상존

○ 북측은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통해 근로자 임금 인상, 숙소 건설 등 문제 해결 요구

- 2.1회담에서 추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문제를 우선 협의하고,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어 숙소문제 등을 추가 논의 키로 함.

2. 해결 과제

□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문제

- 일 단위 상시통행(복수출입), 입·출경 출입계획 분리, RFID출입시스템 구축 등 출입제도 개선
 - 정해진 시간대에 입출경하지 않을 경우, 다시 출입경시간을 확정하는데 3일이 소요되는 불편 해소
- 무선통신(휴대전화) 사용 허용
 - 바이어와의 원활한 상담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통신 수단 확보 필요
- 반출물자 세관검사를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완화

□ 체류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책 강화

- 사건사고시 복측의 조사과정에 우리측 인원의 접견권과 변호사 조력권 보장 및 조사절차 구체화 필요
 -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 반영
- 출입체류공동위 구성·운영 및 세부이행사항 협의 추진

□ 인력공급 문제 해소

- 노력부족현상은 만성적이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심화, 기업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공급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문제 등
- 노력부족에 따라 부적합 인력 교체 어려움, 기업간 경쟁 문제도 야기
- 공급 가능한 개성인근 노동력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조속히 합숙소 건설 문제를 협의하여 외지 인력공급 문제 해결 필요

□ 노무관리 자율성 제고

-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작업지시, 적재적소에 대한 인력배치, 작업교육, 기술지도 등에 있어 기업권한 행사 보장 필요
- 노임직불, 알선노력 심사 등 노동규정 이행 필요

□ 국제적 수준의 법제도 정비

- 분쟁 해결 절차 및 투자보장 장치 마련
- 교통사고, 산재사고, 재해발생시 대응할 종합방제 시스템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 기업자체의 회계 투명성 노력과 더불어 세무회계 제도 개선
- 보험 인프라(자동차 정비소, 병원시스템, 보험금사정 및 보상체계) 확충을 통한 보험제도 개선
 - 복층의 지급 신뢰도 확보, 국내 보험사 진출 허용 등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받는 원산지 문제 해결

□ 관리위원회 역할 제고

- 공단관리, 소방, 산업안전, 기업지원, 기업창설 등록, 건축인허가, 자동차등록, 공영버스 운영 등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집행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제도 보완 및 조직 확충 필요
- 창업, 금융, 경영컨설팅, 인재고용, 판로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책 개발
- 공단내 재정수입과 지출(기반시설관리·유지)의 괴리로 관리위의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 함으로, 수익사업의 개발을 통해 재정기반 확충 필요